한미 공조와 남북 공조

강만길 / 상지대학교 총장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변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미국은 소련군의 전체 한반도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그었다.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한 상태에서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우선 38도선 이남 지역만이라도 확실하게 그 세력권 안에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가 분단되는 길이었다. 일부 다른 설이 있기는 하지만, 2차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그 전체를 제 세력권에 넣는 것이지 분단하려는 정책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미·소 분할 점령이 결정되고 전쟁이 끝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하지 않고 38도선 이북 지역까지를 제 세력권에 넣기는 소련의 양보를 얻어내거나 소련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반도를 분단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그 전체가 적대 지역이 되지 않게 하는 일, 즉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고도 소련 세력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전체 한반도가 중립 지대·완충 지대가 되는 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한반도를 분단해서 그 남반부만이라도 확실하게 제 세력권에 넣는 정책을 택했다. 소련의 對한반도 정책도 역으로 보면 미국과 같았다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무너지자 북한도 쉽게 무너져서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세력권에 포함되리라는 전망이 높았다. 그러나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에 미국은 상황을 길게 보고 북한에 대해 유화 정책을 쓰기도 했다. 부시 정권이 들어서고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자 한 때는 북한에 대해 공격 위협 정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 당국과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쳤고, 이 후에는 대화 제의 정책과 와해 유도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북 정권의 공조체제 수립 의지로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 분위기가 조금 높아지자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제 영향권 안에서 통일되게 해야할 전략이 요긴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탈북민 대형

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와해 유도 정책을 펴는 한편, 대화를 제의하는 등 강온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제 영향권 안으로 통일되게 해야 할 정책적 요긴성이 더 절박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북 공조 정책의 정착 가능성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생산한 6 · 15 공동선언은 남북 당국이 전쟁 통일이나 혁명 통일은 말할 것 없고, 흡수 통일도 부인하고 평화 정착을 통한 옳은 의미의 평화 통일을 위해 공조해 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점차 단계를 높여가야 할 남북 공조와 계속 강화되어 온 한미 공조 사이에 마찰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으며, 그것이 부시 정권 성립, 9 · 11 테러 사태에 이은 보복 전쟁 과정에서 1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설령 대화 제의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해도 앞으로 남북 공조의 정도가 더해지면 질수록 남한 당국을 압박하면서 다시 북한에 대해 와해 유도 정책을 강화해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사 파견으로 오래 동안 막혔던 남북 관계가 다시 활성화 될 가능성을 보이지만, 국제 관계에서건 또는 국내에서건 남북 공조의 진전을 불안해하거나 못마땅해하는 쪽에 대한 남북 당국 공동의 효과적인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한반도 지역은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해소되었다 해도, 그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전쟁 방법으로든 흡수 방법으로든 미 · 일에 치우치거나 중 · 러에 치우치는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한 · 미 · 일 공조체제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강화되면 다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조 · 중 · 러 공조체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남북 공조체제의 단계를 높이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평화 통일의 옳은 길이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반도 주민이 더 많아져야 하겠다.

김대중 정권과 이후의 남북 공조

6 ·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공조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물론 미국 부시 정권의 북한에 대한 강압 정책에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정부의 홍보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6 · 15 공동선언은 한반도가 통일 단계로 들어서는 선언이 아니라 평화 정착 과정에 들어서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6 · 15 공동선언 중 통일 문제를 언급한 부분은 연합제와 ‘ 낮은 단계 ’의 연방제 사

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극히 막연한 구절이 있을 뿐이다. 철도 연결, 공단 건설, 각급 남북회담 지속,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등은 모두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공조를 말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평화 정착 과정, 남북 공조 과정을 통일 과정으로 잘못 인식하고 ‘ 통일의 급진전 ’을 두려워하는 일부 세력에 대한 당국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 그것도 중 · 러 대륙세와 미 · 일 해양세 사이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게 통일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 세력과 민족 내부 세력을 막론하고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지극히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앞 단계인 평화 정착을 위한 초보적 남북 공조조차도 남북 당국자의 결연한 의지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제1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정권은 그 임기가 하루도 연장될 수 없는 정권이며, 그 뒤에는 어떤 정권이 성립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정권 임기중 한 · 미 공조와 남북 공조의 ‘ 상반성 ’을 극복하고 평화 정착과 남북 공조의 정도를 높이는 일은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사 파견으로 되살아난 평화 정착 방안으로서의 철도 연결, 공단 건설, 경제 협력 등이 김대중 정권 중에 가능한 한 많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제2차 정상회담의 성사가 절실하다.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지면 아마 정상회담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거론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장관급 회담도 곧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남한에는 아직도 흡수 통일 가능성을 단념하지 못하는 세력이 많다. 한반도의 경우 흡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설령 가능성이 있다해도 남쪽이 그 뒷 문제를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다음에 만의 일이라도 흡수 통일 지향 중심의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평화 정착과 남북 공조가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